

KWDI

해외통신

2019년 10월 1차 (2019.10.01 ~ 1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교도소 복역 기간 증가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무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강력 폭행 범죄자 및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수감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상해죄(grievous bodily harm, GBH)나 살인,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중범죄자에 한해서다.
- 영국은 2005년부터 ‘표준 확정 형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으면 형량의 절반인 10년은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머지 10년은 출소한 뒤 사회에서 보호 감찰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법을 바꿔서 성범죄자를 비롯한 중범죄자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은 교도소에서 보내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범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법무부가 2019년 4월 25일 공개한 ‘영국·웨일스 범죄자 관리 통계(Offender Management Statistics Bulletin, England and Wales)’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영국과 웨일스 전체 교도소 재소자의 18%(1만3359명)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내년 초부터 음주 감시 전자 발찌 시범 사업이 영국 전역에 도입된다. 발찌 형식의 이 전자 장치는 실시간으로 땀에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해 음주를 통제한다. 지난 2014년 1년 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 시장이었던 시절, 런던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해당 기간 전자 발찌 착용자의 90% 이상이 120일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음주 통제에 효과적이었다. 런던 외 링컨셔 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런던과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
- 특히, 전자 발찌 착용은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가정 폭력, 강간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링컨셔 주 자치 경찰 위원장에 따르면, 링컨셔 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25%가 술과 연관이 있었으며,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가정 폭력 범죄의 경우 40% 이상이 가해자의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참고자료

- GOV.UK (2019.10.01),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to spend longer behind ba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violent-and-sexual-offenders-to-spend-longer-behind-bars> (검색일: 2019.10.15.)
- Ministry of Justice (2019.04.15), “Offender Management Statistics Bulletin, England and Wal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5271/offender-management-statistics-quarterly-q4-2018.pdf (검색일: 2019.10.15.)
- London.gov.uk (2015.07.27.), “Mayor extends sobriety tag pilot, following 91 per cent success rate”,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obriety-tags-extension>

📌 영국 정부는 추가 교정 시설 마련에 25억 파운드(우리 돈 약 3조7천80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존슨 영국 총리가 ‘교정시설 1만 개 추가 마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9월 영국 요크셔 주 지역에 초대형 교도소인 ‘폴 수튼 교도소’ 설립이 확정됐다. 또 앞으로 3년간 경찰 2만 명을 추가로 뽑아 보호 감찰 기간 동안 감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A PILOT scheme which used ‘sobriety tags’ to tackle alcohol abuse in Lincolnshire is to be rolled out across the UK”,
<https://lincolnshire-pcc.gov.uk/news-archive/2019/a-pilot-scheme-which-used-sobriety-tags-to-tackle-alcohol-abuse-in-lincolnshire-is-to-be-rolled-out-across-the-uk/>
(검색일: 2019.10.15)

덴마크 DANMARK



덴마크, 성 불평등한 휴직활용 개선을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개편방안 논의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올해 6월, EU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2022년부터 발효되며, 부모 각 측은 최소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이전 시행령 내용은 유지하되,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위와 같이 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목적은 총 8개월의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성이 쓰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침 제 20조는 ‘아버지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장려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덴마크는 현 육아휴직 기간과 양도가능 여부가 EU 새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아 고민이 필요한 국가들 중 한 곳이다. 현재 덴마크의 육아휴직은 부모 합쳐 출산 및 육아로 총 52주를 보장하는데,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남성은 출산 후 2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9살이 될 때까지 부모 각자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가족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부모끼리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부모 간 양도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평등한 육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육아휴직은 대체로 남성은 약 31일 을 쓰고, 나머지 298일은 여성이 쓴다고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어머니인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불균형 문제로 인해 덴마크 양성평등부에서는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보다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수정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Copenhagen Post (2019.09.26.), “Criticism of earmarked maternity: May hit young female entrepreneurs: Forced leave could further worsen already dire situation”,
<http://cphpost.dk/news/criticism-of-earmarked-maternity-may-hit-young-female-entrepreneurs.html>
(검색일: 2019.10.08.)
- Copenhagen Post (2019.09.05.), “Denmark wants more gender equality in parental law: Government looking to get more fathers to take paternity leave”,
<http://cphpost.dk/news/denmark-wants-more-gender-equality-in-parental-law.html>
(검색일: 2019.10.08.)

덴마크 일각에서는 남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만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길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 특히 여성 사업가들에게는 오히려 EU의 새로운 육아휴직 지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내 모든 여성단체들을 아우르는 여성단체연합인 Kvinderådet(The Women's Council in Denmark)와 18,000여개의 중소기업 연합인 SMVdanmark은 이번 발표된 EU 새 지침에 결함이 있고 오히려 성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사업을 운영하고 남성이 직장인인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이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원하면 똑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든, 한쪽에 몰아주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EU가 발표한 새 지침이 발효되기 전까지 아직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덴마크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충동을 방지하면서 보다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European Union (2019.06. 20.),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L1158&from=EN>
(검색일: 2019.10.08.)

독일 GERMANY



독일, '아버지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대'로 가족친화기업 증가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족친화기업 보고서 2019'에 따르면 독일 기업에서 가족친화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족친화정책을 중시하는 기업 관리자와 인사담당자 비율은 83%에 이르며, 아버지를 위한 지원 조치를 새로 제공하거나 강화된 기업 비율은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3%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 보고서'는 규모별로 대표되는 기업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뤄지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후원한다. 기업별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정책은 규모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대기업이 더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 규모는 직원 수가 5명 ~ 5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정책 영역은 크게 '유연한 근무 시간 및 업무 조직', '(아버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 '아이 돌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정 돌봄 제공', '가족 서비스/정보 및 상담 제안' 등 5가지로 나뉜다. 이중 이전 보고서가 발표된 2015년보다 크게 나아진 영역은 '아버지 지원'과 '유연근무제'이다.

아버지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기업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8년 53%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체 기업 중 36% 기업에서 아버지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과 시간제 근무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 돌봄을 하고 싶거나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지원하는 회사 비율도 높아졌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09.16.),
"Unternehmensmonitor Familienfreundlichkeit 2019".
www.bmfsfj.de/unternehmensmonitor
(검색일: 2019.10.12.)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09.17.),
"Familienfreundlichkeit stärkt Arbeitgeberattraktivitä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familienfreundlichkeit-staerkt-arbeitgeberattraktivitaet/138476>
(검색일: 2019.10.12.)

- 이러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28%에서 남성 관리자가 육아휴직을 자발적으로 사용했으며, 25%의 아버지가 자녀 출생 시 육아 휴가나 시간제 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약 15%는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를 한정된 기간에 한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는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아버지의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남성의 가족친화정책 이용률이 크게 늘었는데, 예를 들어 남성 관리자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예외적인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 ‘아버지 지원정책’과 함께 가족친화기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유연근무제 확대’다. 직원들은 모바일 기술 확산과 유연근무제가 미래를 위한 주요 주제라고 답했다. 응답 직원의 44%, 응답 기업의 59%가 향후 5년 안에 유연근무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정책 중에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 이용이 크게 늘었다. 10개 기업 중 8곳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체 기업의 92%가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를 실시하는 기업 중 79%는 정해진 기간에 한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개 기업 중 8곳에서 개별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에서는 주 4일 근무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주 4일 근무 모델을 택한 직원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주 4일에 나눠 근무(예를 들어 일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2시간씩 초과 근무)한 후 나머지 하루를 쉬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율로 결정하는 ‘신뢰기반 근무’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48% 정도이며, 약 43%의 기업은 재택근무 등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드시 모바일과 관련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조 산업 등의 다른 업무 영역에서도 신뢰 기반 근무 등이 사용되고 있다. 14%의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쉴 수 있는 안식 기간을 운영 중이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90%에 이르는 직원이 가족친화정책이 기업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책 이용 시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일이므로 직원 가족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주요 인사정책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피의자 성별 비공개 전환으로 젠더폭력 현황파악에 어려움 예상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현재 캐나다는 범죄자의 실명, 사진을 비롯한 자세한 신상 정보를 언론에서 자유롭게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해 캐나다 노스욕(North York) 한인타운에서 뱅을 몰아 인도로 돌진하여 아홉 명의 사상자를 낸 여성혐오 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출신 학교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사건직후 공개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인이 수사관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범인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키워왔으며 어떤 단체를 통해 범죄를 구상해 왔는지가 대중에게 드러났다. 그런데 앞으로는 캐나다의 이러한 투명한 범죄자 신상 공개 관행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9월 23일 월요일 온타리오주 경찰은 더 이상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등 범죄에 연관된 개인들의 성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행법이 경찰로 하여금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경찰은 진보적인 시대 변화에 맞추어 성별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경찰은 이번 결정이 특정 사건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경찰이 개인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성별을 잘못 추측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경찰은 현재 온타리오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캐나다의 여러 주의 신분증에서 성별을 더 이상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찰 또한 개인의 외모에 기반을 두어 젠더를 규정하고 이를 공공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경찰은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도 남성 혹은 여성 보다는 “피의자”, “운전자”, “용의자”등 성 중립적인 호칭을 사용할 것이라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성별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경찰은 성별 정보는 경찰 내부 분석용으로만 수집될 것이며, 종전대로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의 이름, 나이와 고향 등은 공개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용의자나 실종자를 경찰이 수색 중인 경우에 한해 성별정보를 공개할 것이라 한다. 경찰은 이날 경찰 행정의 목적은 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범죄 사건에 있어 피의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설명하면서, 온타리오 경찰은 내년 5월부터 이를 일선에서 시행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내부 정책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일선 경찰들의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 발표했다.

참고자료

- The Globe and Mail (2019.09.24.), “Researchers, advocates argue OPP gender rule change will blur understanding of crimes against women”,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searchers-advocates-argue-opp-gender-rule-change-will-blur/> (검색일: 2019.10.08.)
- CBC (2019.09.23), “OPP no longer identifying gender of victims and accused involved in crimes”, <https://www.cbc.ca/news/canada/london/opp-no-longer-releasing-gender-1.5293637> (검색일: 2019.10.08.)
- Ontario Ministry of the Solicitor General (2019.01.30.), “Ontario Sex Offender Registry”, https://www.mcscs.jus.gov.on.ca/english/police_serv/sor/sor.html (검색일: 2019.10.08.)

온타리오 경찰의 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공의 알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특히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범죄 관련한 시민단체들로 부터의 비판이 거센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캐나다 여러 주에서 경찰이 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 범죄자나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 하는 등 정보 공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캐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젠더적 측면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페미사이드 감시단은 온타리오 경찰의 발표 바로 다음 날 공개한 입장을 통해 경찰의 조치가 앞으로 캐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실상을 알기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통해 캐나다 전역의 여성 혐오 살인 현황을 파악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캐나다 전역에서 대략 150여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온타리오에서는 65명이 살해당한 것을 밝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경찰이 범죄의 젠더 맥락을 소거한 채 단지 한 개인이 한 개인을 살해했다는 식의 정보만을 공개된다면 캐나다 사회가 범죄의 구조적 배경을 이해하는 역량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 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개의 사인으로 보인다. 현재 온타리오의 경우 별개의 법령(Christopher's Law)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명단을 구축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성범죄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는 즉시 이 명단에 등록되며 범죄자의 이름과 신상정보, 성범죄자가 7일 이상 머문 곳의 주소,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 범죄 수법, 범인의 고용주와 종사 분야가 기록된다. 또한 온타리오는 모든 성범죄자의 DNA를 수집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범죄자를 성범죄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실형 수감이 끝난 뒤에도 경찰의 감시를 적용하고 있다.